

2014년도
기본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연구책임
기본 과제	노후 대규모 공동주택의 단지재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엄철호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차주영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활용계획 운영을 위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심경미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의 토지이용성능 규제 연구	김승남
	생활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제도 연구	여혜진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 방안 연구	유광흠
	근린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임유경
	단독주택지의 계획적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제도 구축	서수정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이상민

기본 과제**01 노후 대규모 공동주택의 단지재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정부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서 구조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방안과 함께 다양한 리모델링 방식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불편사항을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그동안 리모델링은 전면재건축의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업계나 추진단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수직·수평증축과 세대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주택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주호와 주동만을 개선한 리모델링 단지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환영받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단순한 물리적 개선방식 위주의 리모델링으로 새로운 거주자·소유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단지의 가치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보다 공동주택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일본은 노후 주거지에 대해 기존 거주 환경과 거주자의 지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마을만들기의 개념을 도입한 '단지재생'과 '에어리어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도 이제는 기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방식의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순차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지재생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재생 방식의 개념 정립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단지재생 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노후 대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안정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노후 대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및 서민주거 안정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염철호

02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공공청사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중심적 생활거점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이다. 나아가 공공청사는 지역의 대표적 명소로서 상징성을 가지며, 공공의 핵심 자산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공공청사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건설경기 조정이나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에너지 절약’, ‘장애인 지원’, ‘호화청사 논란’ 등의 이슈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청사가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와 미래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각종 계획기준은 시대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공공청사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두어 필요한 기준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적용하여 이용하기 좋고 품격 높은 공공청사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과 관련한 현행 계획기준을 검토하고, 기존 공공청사의 공간 이용현황과 수요를 파악하여 공공청사의 미래상을 설정해 본다. 이와 함께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기준의 설정 방향을 제시하고, 현행 계획기준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효율성 높은 업무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공공청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차주영

03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 · 활용계획 운영을 위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역특성화와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써 건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대적인 활용을 통한 건축자산의 보전 및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의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이다.

본 법은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 제도 도입,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을 통한 면적 관리 강화, 한옥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육성,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중 건축자산의 면적관리를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여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 및 목록구축이 미흡하여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따라서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유형 분류와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통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관리체계와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특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 파급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실제 사례지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운영지침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정립을 통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현황과 관리·활용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향후 보전·관리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제 적용 가능한 대상과 적용 효과를 예상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절차 등 운영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도입의 근거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미

04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의 토지이용성 규제 연구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15~30%)의 최고 수준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이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

별 감축목표 및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 부문에서도 2020년까지 BAU 대비 26.9% 감축목표(약 48만톤CO₂eq)가 할당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탄소 건축·도시 설계요소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이를 유도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의 토지이용성 규제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 집중지역(Hot-spot)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영향요인과 입지특성을 고려한 지역별·토지용도별 온실가스 감축 성능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토지용도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토지이용성 규제 및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에너지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를 일반화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용도지역별 적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토지이용 관리제도 개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05 생활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제도 연구

현대는 과거에 추진했던 대규모 정비방식의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최근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심의 생활환경 개선은 현장중심·장소중심의 세부적 대응이 뒤따라야 하는 점진적 마을만들기 구현을 위해 매우 필요하며,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마을기업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고, 최근까지의 마을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고찰하면서 마을기업이 지역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검토한다. 또한 해외의 마을기업 등 활성화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ary business) 관련 지원제도 및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여건에 맞는 마을기업 활성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도시재생법에 의한 근린재생사업의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써 저층주거지 내 주민과 소형 건설업체가 협력하는 '건축조합' 형태를 제안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 주체의 다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신성장동력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마을기업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각 지자체 등 매우 광범위하다.

연구 성과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정책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고, 부처 간 협력역량을 키우고 공공-민간 간 거버넌스를 통한 근린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해진

06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 방안 연구

건축법령의 대표적 법률인 건축법은 허가절차, 기술기준, 현장관리 및 유지관리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각종 규정이 혼재하는 전근대적 입법이다. 1962년 제정된 이래 잦은 개정으로 인해 법체계 혼란, 규율범위 혼재, 위임입법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법해석 자체가 어려워 단순·반복적인 법해석 질의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건축행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건축행위의 모범 역할을 하는 건축법 내에서도 건축기준은 상하위 법률 간 위임관계의 불명확, 건축기준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건축법 이외에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복잡하고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건축규제를 국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식하는 대표적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축법 내에서도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와 지자체 조례에 산재되어 있으며, 타 법률에서도 규율하고 있어 그물망과 같이 얽혀져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에 놓인 건축기준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건축 관련 법률의 요건을 분석하여 건축기준 관련 법률의 체계와 구성 내용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건축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유광홍

07 근린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의한 주거지 정비 사업 추진이 정체되면서 주거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점진적인 재생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에는 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 등 주거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여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 주차장 부족, 대형마트 확산, 경기 침체 지속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창조경제' '경제 민주화'와 함께 3대 전략으로 내세우고 다양한 규제 및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은 대형마트 및 SSM 영업규제와 예산 지원, 경영 합리화 등 경제적 측면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골목상권 쇠퇴는 지역 차원에서 일어나는 도시 문제임을 고려할 때, 도시 재생과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린상업가로를 주거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린상업가로'에 대한 개념 정립, 일반주거지

역 내 근린상업가로 현황 조사 및 과제 도출,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과정을 통해 근린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주거지 재생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근린상업가로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소규모 맞춤형 도시계획 실현,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요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유경

08 단독주택지의 계획적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제도 구축

최근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 주거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땅공주택, 단지형 한옥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코하우징 등 주거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거수요와 함께 의료·복지·문화시설 등의 편의시설과 쓰레기 집하시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 생활지원시설 지원이 가능하고 주거지로서 편의성과 쾌적성을 갖추고 있는 공공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는 점포병용주택의 난립,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필지구획과 토지공급, 고급화 경향에 의한

일반 단독주택 수요자들의 접근이 제약되는 등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단독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품격 있는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획지계획, 단독주택지 계획적 관리, 토지공급 이후 주택건설까지 단독주택지 조성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순한 토지수급관리 계획에서 벗어나 '택지계획 및 조성+주택건설시스템+단독주택 공급'을 고려한 체계적 조성방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독주택 조성 과정이 상품생산 과정에서 문화적 생산 과정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수정

09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국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이 가장 많은 비중(43.7%, 2012년 국토부자료)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도시공원의 면적은 10억 2,009만 9,097㎡이지만 미집행 공원의 면적은 6억 807만 5,580㎡로, 60% 정도의 도시공원이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 자동실효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2020년 이후 도시공원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원 관련 업무가 모두 지자체로 이관되어 도시공원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는 각 지자체에 있어, 현재 많은 지자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의 일상적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원의 미집행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미집행 공원의 현황 및 실태를 심도 있게 조사·분석하여 미집행 공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2020년 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제를 앞두고 미집행 공원의 합리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민

포럼 및 세미나

포럼 및 시상식

2013 auri 국가한옥센터 제4차 한옥포럼
'우리가 배우고 싶은 한옥' 및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최한 '2013 auri 국가한옥센터 제4차 한옥포럼'이 2013년 12월 20일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과 연계하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한옥포럼은 올해 '우리가 원하는 한옥'이라는 대주제로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한옥교육과 관련하여 '우리가 배우고 싶은 한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변숙현 교장(한옥아카데미, 한발한옥직업전문학교)의 '한옥 학교의 교육과 진로'를 시작으로 남해경 교수(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가 '한옥설계와 건축가의 교육', 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변숙현 교장은 민간부문에서 10여 년 동안 한옥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루어낸 성과와 고민하였던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학교 졸업생에 대한 처우개선, 교육의 내실화, 목수 노동조합 결성, 한옥교육기관 업무를 국



토교통부로 이관, 교육기관들의 4대 보험 의무가입, 한옥 R&D 성과의 공유 등을 통하여 국가기술개발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해경 교수는 3년간 진행한 한옥설계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전북 대학교의 한옥 분야 교육, 그리고 전북에서 시행되는 한옥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노력의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한옥설계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장기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교육기관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의의와 한옥 전문인력의 정의, 그리고 한옥교육의 현황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한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인증을 통한 교육품질 제고, 자격제도 정비를 통한 처우 개선, 특화교육과 계속교육 시행을 통한 전문성 강화, 인력 간 교류 및 협업 장려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순용 대표(삼아성건축사사무소)를 좌장으로 김상태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김정희 과장(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종남(문화재보수기술자), 한필원 교수(한남대학교 건축학부)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옥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한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던 이날 행사장에서는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한옥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한옥건축·한옥계획·한옥사진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건축 부문 3개를 비롯하여 계획 부문 18개와 사진 부문 44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한옥계획 및 한옥사진 부문은 '한옥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한옥이 지금, 현재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의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다. 준공된 건축물에 수여되는 올해의 한옥대상에는 어린이 교육·체험시설인 '산청울수원(경남 산청군)'이 선정되었고, 올해의 한옥상은 '#200(서울 종로구 가회동)'과 '그리움이 지은 집 시하정'이 받았다. 계획 부문에서는 한옥단지의 마당을 현대적 공간으로 수용한 '잠원' 외에 지하철 역사에 한옥을 시도하여 도심지

환경에 변화를 준 '광화문역 5번 출구 의외루' 등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사진 부문에는 한옥의 담장길을 표현한 '토담길의 한옥'이 선정되었다.

세미나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행정기획단이 공동 주관한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2013년 12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3.0* 시대에 발맞춰 활용도가 높은 건축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

방·공유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였다. 제1부에서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성호 과장의 발표('건축행정 데이터 민간개방 정책방향')를 시작으로 LH토지주택연구원 등 6개의 시범사업 참여 기업이 기업특색에 맞는 서비스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된 6개의 과제는 '건축정보를 활용한 통합입지분석'(공공주택 전문 공공기업 LH토지주택연구원), '대국민 데이터 효율 증대를 위한 부동산종합서비스'(부동산 포털 전문기업 부동산114), '건축법규 검토 솔루션 개발'(건축건설 소프트웨어 유통 전문기업 다우데이터), '태양광 발



전 경제성 분석 및 입지분석' (태양광 컨설팅 전문기업 이튼스토리), '공간기반의 정책지도 서비스' (GIS마케팅 전문기업 BIZ-GIS), '건축데이터 기반의 정보유통 서비스' (공공정보화 전문기업 솔리데오시스템즈)다.

발표가 끝난 후 국토교통부와 이들 6개 기업 간의 '건축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협약체결'이 진행되었다.

제2부에서는 김상욱 교수(충북대학교 경영대학)가 '건축데이터 개방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철호 위원장(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을 좌장으로 이화순 건축정책관(국토교통부), 이용석 과장(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윤정중 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권현영 교수(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정국환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건축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이화순 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건축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



2014 제1회 AURI 건축도시포럼(도시재생 컨퍼런스-도시재생지원기구 합동세미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2월 21일 LH 오리사옥 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컨퍼런스-도시재생지원기구 합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3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4 제1회 AURI 건축도시포럼의 일환으로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전략'을 주제로 도시재생지원기구 합동세미나(세션2)를 주관하였다. 서수정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활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축문화기반의 근린재생은 장소 중심의 삶, 문화, 일자리가 함께하는 거주자 중심의 통합적인 재생이며 도시 및 근린재생의 원동력이 되는 건축공간을 활용한 점진적인 재생임을 강조하였다.

서 연구위원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제도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경관협정, 주택관리지원센터(가칭, 예정)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축문화기반의 통합적 근린재생을 위해 거너번스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의 정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심경미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

소)은 '지역의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아일랜드 더블린의 문화지구(Temple bar), 일본 구라시키 이야기관 주변지역 등 해외의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심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건축문화자산의 활용이 지역특성 유지와 형성, 창조적 공간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가로와 지역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효과적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와 도시재생의 연계 가능성도 소개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구자훈 교수(한양대 도시대학원)를 좌장으로 하여 이영범 교수(경기대 건축대학원), 서종균 초빙연구위원(한국도시연구소), 박세훈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최민아 수석연구위원(LH 토지주택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정비 방식의 대안적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 확보라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아울러 계획가적, 공공적 접근과 예술가적인 유연한 접근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뿐 아니라 도시재생의 결과에만 치중하기보다 기존 도시의 쇠퇴 원인, 진단 방법, 재생 방법 등에서 기존과 다른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건축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이슈에 관심 있는 지자체 공무원, 건축설계사무소 실무자, 연구소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하여 지역과 도시의 특징을 살린 국내외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와 향후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3 AURI 국제 컨퍼런스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건축도시공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최한 '2013 AURI 국제 컨퍼런스'가 2013년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사회가 급격한 인구사회적 변화를 겪

으면서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 및 국민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건축도시공간'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공간정책 및 공간계획의 이론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컨퍼런스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건축과 도시공간'을 다루었다. 미국의 Susan M. Goltsman (MIG Inc 설립자)이 '모두를 위한 도시 : 어린이, 청소년, 가족을



위한 환경 디자인'에 대해 발표한 데 이어 일본 센다 미쓰루 회장(환경디자인연구소)이 '아동을 위한 환경 설계'를 제목으로 한 어린이의 성장과 보육 환경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발표하였다. 또 김상호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한국의 아동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성이 행복한 건축과 도시공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양희 디렉터(젠더앤리더십)가 '성평등과 도시공간 : 도시정책의 성 주류화'를, 이선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여성의 일상을 배려하는 도시환경'을, 미국의 Kathryn Anthonny 교수(일리노이대학교)가 '공중 화장실 디자인에 있어서의 젠더와 가족 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 세션은 아시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싱가포르 · 일본 · 한국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건축과 도시공간'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Code Review Committee 위원장 Siam Imm Goh(BCA)는 '모두를 위한 공간환경 : 싱가포르 Accessibility Code Review'를, 일본 다나카 나오토 특임교수(시마네대학대학원)는 '건축 · 도시환경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과 일본에서의 실천사례'를, 오성훈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보행자를 위한 도시공간 디자인'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행사는 미국 · 일본 · 싱가포르 · 한국의 계획가와 연구자를 초청하여 아동과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건축과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건축과 도시공간 분야에서의 공간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

구축 및 개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 · 도시 관련 정책동향 및 문화자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아우름(<http://www.aurum.re.kr/>)을 구축하고 4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우름' 홈페이지는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축 정책 및 자산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 · 도시 관련 주요 정책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국가 및 지역 건축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그동안 정보관리가 미흡했던 건축문화자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 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할 예정이다. 아우름의 주요 메뉴는 크게 정책동향, 연구동향, 건축INFO, 건축자산, 설계경기,



인물/조직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언론보도뉴스, 제도기준 등 건축 · 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이슈와 관련한 연구동향과 산업동향 및 통계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스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시상제도를 통해 수상한 우수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보를 비롯하여 2,400여 건의 건축자산 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정보와 관계 인물, 조직 정보를 연동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향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고, 건축도시 분야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